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436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박상혁 · 한민수 · 이연희  
조정식 · 김주영 · 남인순  
이해식 · 한준호 · 이강일  
강준현 · 허성무 의원  
(11인)

### 제안이유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규제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며, 규제정책과 관

련된 국제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6호, 제18조의 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기존규제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도입(안 제7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1조,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다.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안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 결과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활용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안 제37조제1항)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 규제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를 “규정하고 행정규제를 합리화하여”로, “촉진하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후규제영향평가”란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원칙과 심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입법예고”를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신설하거나 강화”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3항(제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를 “제9조(제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전단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신설 또는 강화”를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설하거나 강화”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을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①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 분야·대상 선정, 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의3에 따른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

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가 제18조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또는 그 밖에 기존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서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능동적”을 “적극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국제규제협력) ① 위원회는 국제규제협력(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 규제 관련 정보 공유, 정책 협의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제규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규제협력 관련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해외 규제정책 등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과의 정보 교환
  3. 규제정책 관련 공동 정책 조사·연구 및 인력교류 등
  4. 그 밖에 국제규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u>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u>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u>촉진하여</u>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 <u>규정하고 행정규제를 합리화하여</u> -----<br>-----<br>-----<br>----- <u>촉진하고</u> 국<br><u>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u> ---<br>-----<br>-----.                       |   |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5. (생략)<br><u>&lt;신설&gt;</u><br><br>② (생략)                                                                      | 제2조(정의) ① -----<br>-----.<br>1. ~ 5. (현행과 같음)<br>6. “사후규제영향평가”란 기존 <u>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u><br>② (현행과 같음) |   |   |   |
| 제2장 <u>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u>                                                                                                                             | 제2장 <u>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원칙과 심사</u>                                                                                                                                  |   |   |   |
|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br>① (생략)<br>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br>① (현행과 같음)<br>② -----                                                                                                                        |   |   |   |

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 입법 예고(행정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

|                                                                                                                        |                                                                                                                                                                                                                                                                                                                                                                      |
|------------------------------------------------------------------------------------------------------------------------|----------------------------------------------------------------------------------------------------------------------------------------------------------------------------------------------------------------------------------------------------------------------------------------------------------------------------------------------------------------------|
|                                                                                                                        | <p><u>익의 비교 분석</u></p> <p><u>5.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u></p> <p><u>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u></p> <p><u>7.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u></p> <p><u>②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u></p> |
|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u>신설하거나 강화</u> 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p>제10조(심사 요청) ① -----</p> <p>----- <u>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u>-----</p> <p>-----.</p> <p>-----</p> <p>-----.</p>                                                                                                                                                                                                                                       |

|                                                                                                                                                                                                                                                                                                                                                                                                                                                     |                                                                                                                                                                                                                                                                                                                                                                                                                                                                      |
|-----------------------------------------------------------------------------------------------------------------------------------------------------------------------------------------------------------------------------------------------------------------------------------------------------------------------------------------------------------------------------------------------------------------------------------------------------|----------------------------------------------------------------------------------------------------------------------------------------------------------------------------------------------------------------------------------------------------------------------------------------------------------------------------------------------------------------------------------------------------------------------------------------------------------------------|
|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u>제7조제1항</u>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p> <p>2. <u>제7조제3항</u>에 따른 자체심사의견</p> <p>3. <u>제9조</u>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p> <p>③ 위원회는 <u>제1항</u>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u>제13조</u>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u>신설 또는 강화</u>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p> | <p>② -----<br/>-----<br/>-----<br/>-----<br/>---.</p> <p>1. <u>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u>-----<br/>-----</p> <p>2. <u>제7조제3항(제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br/>---</p> <p>3. <u>제9조(제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③ ----- <u>제1항</u> 전단에 따라 <u>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u> -----<br/>-----.</p> <p>제14조(개선 권고) ① -----<br/>----- <u>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br/>-- <u>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p> |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 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  
-----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

② -----  
-----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  
-----.  
-----  
-----.

제17조의3(신산업 분야 기존규제

의 정비) ①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3. (생략)

② (생략)

<신설>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 분야·대상 선정, 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의3에 따른 전략적 규제 정비 대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가 제18조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또는 그 밖에 기존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다.  
 1.·2. (생 략)  
<신 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요청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연구기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  
 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된 사후규제영향평가서의 타당  
 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소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제24조(기능) ①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                                                                                                                                                            |                                                                                                                                                                                                                                                                                                                                                                                                                                                                                                                                                                                                                                                                                      |
|------------------------------------------------------------------------------------------------------------------------------------------------------------|--------------------------------------------------------------------------------------------------------------------------------------------------------------------------------------------------------------------------------------------------------------------------------------------------------------------------------------------------------------------------------------------------------------------------------------------------------------------------------------------------------------------------------------------------------------------------------------------------------------------------------------------------------------------------------------|
| <p>3. (생략)<br/><u>&lt;신설&gt;</u></p> <p>4. ~ 7. (생략)<br/>② (생략)<br/><u>&lt;신설&gt;</u></p> <p>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u>능동적으로</u>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p> | <p><u>관한 사항</u></p> <p>3. (현행과 같음)<br/><u>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에 관한</u><br/><u>사항</u></p> <p>4. ~ 7.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br/><u>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u> <u>구</u><br/><u>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규제</u><br/><u>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평</u><br/><u>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u><br/><u>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u><br/><u>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u><br/><u>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br/><u>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u><br/><u>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u><br/><u>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u><br/><u>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u><br/><u>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u><br/><u>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u><br/><u>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u><br/><u>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u><br/><u>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u><br/><u>다.</u></p> <p>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br/>----- <u>적극</u><br/><u>적</u>-----</p> |
|------------------------------------------------------------------------------------------------------------------------------------------------------------|--------------------------------------------------------------------------------------------------------------------------------------------------------------------------------------------------------------------------------------------------------------------------------------------------------------------------------------------------------------------------------------------------------------------------------------------------------------------------------------------------------------------------------------------------------------------------------------------------------------------------------------------------------------------------------------|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신설>

-----  
-----  
-----  
-----.

이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국제규제협력) ① 위원회는 국제규제협력(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 규제 관련 정보 공유, 정책 협의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제규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규제협력 관련 국제기구

|  |                                                                                                                                                                                                                                                                                                                                                             |
|--|-------------------------------------------------------------------------------------------------------------------------------------------------------------------------------------------------------------------------------------------------------------------------------------------------------------------------------------------------------------|
|  | <p><u>또는 외국 정부 등과의 교섭<br/>및 협정 체결</u></p> <p><u>2. 해외 규제정책 등 정보 수집</u><br/><u>· 분석을 위한 국제기구 또는</u><br/><u>외국 정부 등과의 정보 교환</u></p> <p><u>3. 규제정책 관련 공동 정책 조</u><br/><u>사·연구 및 인력교류 등</u></p> <p><u>4. 그 밖에 국제규제협력을 위</u><br/><u>하여 필요한 사항</u></p> <p><u>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 각 호</u><br/><u>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u><br/><u>·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u><br/><u>할 수 있다.</u></p> |
|--|-------------------------------------------------------------------------------------------------------------------------------------------------------------------------------------------------------------------------------------------------------------------------------------------------------------------------------------------------------------|